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한목소리…조사 범위는 딴목소리

국힘 "보안 점검 거부 들여다 봐야"
민주 "자녀 특혜 채용에 집중해야"
이르면 12일 계획안 의결 될 수도

여야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물밑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고,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여야의 지난 1일 협의에서는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데다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채용'이 논란이 된 만큼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계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이 선뜻 해킹 의혹까지 국조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측간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검증특위 설치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방안을 요구하는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지렛대 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다른 사안과 딜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다. 국회 검증 특위와 청문회 문제는 별도로 요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국조 범위에 대한 입장차만 해소하면 국정조사 착수까지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갈 걸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

계획안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기한도 정해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나 위원 구성 등은) 관례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원장·선관위원 전원 고발 당해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35%

갤럽조사…국힘 35%·민주 32%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공식 출범

1실·1국·5과 늘어 조직도 커져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 작업이 추진 1년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다.

공교롭게도 진보 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었으나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를 차관급 부처로 낮춘 것은 정부 조직 슬림화 차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올린 것은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배경이었다.

이제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장관의 헌법적 권한이다.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가 보훈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두 행사가 "당연히 보훈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첫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보훈이란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